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5월 3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30.(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29.(화)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일자리창출 지원 TF
담당과장	손호영 과장(044-203-5530) 오승철 단장(044-203-5181)	담 당 자	주미나 사무관(044-203-5537) 신유철 사무관(044-203-5182)

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강조 -
- 청년고용 친화형 사업 확대, 하반기 채용 증대 등 일자리 창출 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①**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②**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③**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점검** 등을 논의했다.

□ 백운규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시적인 정책성과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하고,

○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이니 만큼, 기관장을 중심으로 결연한 각오로 채용비리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청산**하고,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부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 · 투자사업 확대

산업부, 사업예산의 50%를 일자리 연계형으로 개편, 5년간 일자리 3.5만여개 추가 창출
공공기관, 5년간 74.6조원 투자하여 민간의 청년일자리 8.8만여개 창출

○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예산 및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5만 3천여개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25.5조원(GDP의 1.5%)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청년고용 친화적인 예산사업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산업부('18) : 6.72조원, 795개 예산(내역)사업 / 공공기관('17) : 투자사업 18.8조원
** (붙임 2)「**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 우선, 산업부는 예산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그간의 경쟁력 중심에서 **"경쟁력+일자리 효과"로 평가체계를 대혁신**키로 하고, 현재 예산액 기준 11.3%(7,604억 원, 사업수 76개)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3.3조 원, 사업수 235개)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확대 계획 보유기업**에게 ① **특전(인센티브)**를 주거나, ②**채용조건부로 지원**하거나, ③**직접적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등의 개편 방식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기로 했다.

◇ **(인센티브)**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일자리 평가항목 신설, 기술료 감면, 금융우대 등
◇ **(채용조건부 지원)** 일정 예산규모당 1명씩 채용 유도, 참여요건 부여 등
◇ **(직접 취업연계)** 인건비 보조, 인력양성 및 일자리 프로그램의 취업연계 강화 등

- 이 개편은 **추가 재정소요 없이 사업설계 및 운영방식을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일자리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18년 3,900여개, '19년 이후 연간 7,900여개 등 **'22년까지 5년간 총 3.5만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 공공기관은 그간 **일자리 창출에 투자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공감하고,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한전 등 투자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17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18~'22년)간 자체 재원 총 74.6조원을 투자**하여 **5대 분야 1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연평균 14.9조 원**으로 지난 5년 평균(10.1조 원)보다 **4.8조 원 증가**)

  * (에너지·자원 15개)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 (산업·기술·무역 2개) KOTRA, 산업기술시험원

  ** ①에너지신산업(25개), ②발전 등 주력산업(18개), ③해외진출 프로젝트(9개), ④상생 생태계 발전(33개), ⑤지역일자리(15개)

- 이를 통해 '18년 1.7만 여개, '19년 1.8만여개 등 **'22년까지 5년간 총 8.8만 여개의 민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 '13~'17 연평균 13,000여명 → '18~'22 연평균 17,000여명(+**4,600여명**, 35%↑)

○ 산업부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개편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행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일자리 연계형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을 신속히 추진**(~'18.7월)하는 한편, **사업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도 강화**했다.

  *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 전담(위탁)기관 내부 규정 등

-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예산 및 투자사업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 기업과 **청년구직자간의 일자리 매칭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혁신성장 지원, 에너지 신산업 확대, 안전강화** 등 중심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정원 증원을 통해 **2018년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율정원조정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의 증원요청에 대한 산업부 검토 결과,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이 확정되었으며,

* 청년일자리 대책('18.4월)으로 자체인건비 충당 가능한 공공기관의 4급이하 실무인력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정원 조정(산업부는 11개 기관 해당)

- 여타 기관은 기재부와의 수시 정원 협의를 통해 **6월중 증원 규모를 추가해 확정**하기로 했다.

- 이번 수시 증원 외에, 기관별로 정원 범위에서 부족한 현원 충원 등을 통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3. 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채용비리 개선 방안 이행**을 통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계획

- **(정규직 전환)** 1단계(공공기관)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사전문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채용비리 근절)**「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5.3일)」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관별 내규 정비 등** 이행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기재부) 반영, 감사 의뢰 등 엄중 관리 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주미나 사무관(☎ 044-203-5537), 일자리TF 신유철 사무관 (☎ 044-203-51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장 회의 계획(안)**

□ 추진 배경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과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역할 당부**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5.30(수) 10:00~11:00 / 세종청사 대회의실(506호)

○ **참석자** : **(산업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기조실장, 자원실장 등
(공공기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

○ **회의안건(안)**

① 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② 공공기관 채용 확대

③ 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후속대책 점검

□ 세부 일정(안)

(사회 : 혁신행정담당관)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0:00~10:02	2′	· 국민의례	사회자
10:02~10:05	3′	· 임명장 수여	산업부 장관
10:05~10:10	5′	· 모두 말씀	산업부 장관
10:10~10:25	15′	· 안건 설명	산정국장, 정책기획관
10:25~10:30	5′	· 기관 발표(채용비리근절 표준행동매뉴얼)	한국전력공사
10:30~10:55	25′	· 토 론	참석기관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 장관 모두발언까지만 대외 공개

붙임 2 **산업부 · 공공기관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 · 투자사업 확대방안**

1. 예산 · 투자사업 현황

□ 산업부와 공공기관(41개)의 **연간 사업재원은 25.5조원**(GDP의 1.5%)

○ **(산업부)** '18년 기준 **795개 사업에 6.7조원** 투입 **(공공기관)** '17년 **투자사업 규모는 18.8조원**

< 산업부·공공기관 가용자원 현황 >

구분	산업부 예산사업*						공공기관 투자사업**	합계
		산업·기술	지역	무역·투자	에너지	기타		
사업 규모(억원)	67,241	23,316	5,434	4,357	31,833	2,301	187,993	**255,234**
사업수(개)	795	351	38	36	214	15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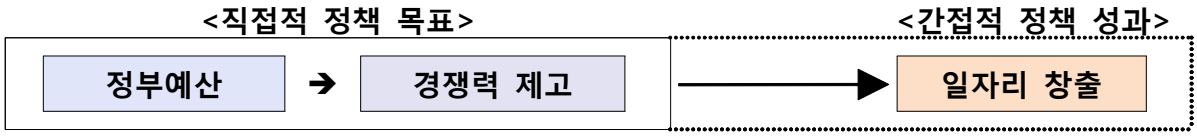
* '18년 총 예산(6.86조원) 中 인건비·기본경비 1,317억 제외 // ** '17년 기준

2. 예산 · 투자사업의 일자리 연계 관점 평가

□ **(산업부) 일자리 연계형 사업***은 **예산액 기준 전체의 11.3%(7,604억)**에 불과

* 일자리 우수기업 가점부여 사업 52개, 인력양성 사업 15개 등 76개 사업

○ **"경쟁력 제고 및 기업성장"**을 직접적 산업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간접적·부차적 정책성과로 간주**해 온 경향



□ **(공공기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GDP의 1%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 투자효율성 위주의 사업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 **산업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투자**를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적극 활용 필요**

3. 추진방안

◇ **(산업부) 추가 재정소요 없이 사업 설계 및 운영방식을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일자리 효과 제고

* '18년 3,900여개, '19년 7,900여개, '22년까지 총 35,000여개 일자리 추가 창출

◇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 '18년 1.7만여개, '19년 1.8만여개, '22년까지 총 8.8만여개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중심의 산업부 사업·제도 개편

□ **(개편내용)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예산액 기준으로 개편前 11.3%에서 **개편後 49.2%**(235개, 3.3조원)**로 대폭 확대**(사업수 76개 → 235개)

○ 지원기업 선정시 경쟁력 중심에서 **경쟁력+일자리로 평가체계 개편***

* ①인센티브 부여, ②채용조건부 지원, ③직접 취업연계 강화

< 일자리 연계 세부 유형 및 대상 사업 수 >

①인센티브 부여	가점 부여	65개
	평가지표 반영	54개
	R&D 3종 패키지(기술료 감면, 현금부담 완화)	139개
	보조금 상향, 금융(보험료·한도 등) 우대 등	7개
소계	**265개**	
②채용조건부 지원	R&D 3종 패키지(출연금 5억당 1명 채용조건부 지원)	136개
	참여요건 제한, 인건비 최소비중 상향 등	14개
소계	**150개**	
③직접 취업연계	인력양성 사업	15개
	인건비 보조, 일자리(취업) 매칭 프로그램 등	4개
소계	**19개**	
합계	**235개***	

* 복수의 일자리 유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사업이 있어 개별 유형의 합이 개편사업 수보다 많음

□ **(분야별 연계방안)** 산업·기술, 지역, 무역·투자, 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방안 마련**

○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격려 및 독려**를 위해, '상공의 날' 등 **주요 포상(18종)에 일자리평가 적극 반영**(일자리평가 신설 7종, 강화 11종)

< 분야별 주요 개편내용 >

1 (산업·기술) 고용친화형 R&D 도입 및 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 강화

□ **(R&D사업) 사람 중심 R&D** 실현을 위해 **"고용친화형 R&D" 도입**

* 순수 R&D사업 139개(2조 57억)에 '18.5월부터 본격 적용

○ **채용조건부 지원**(국비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인센티브**(청년 신규채용·유지시 **기술료 감면*** 및 **민간 현금부담금 완화****)

* 과제종료 후 사업화단계에서 추가채용 및 2년간 채용유지시 연봉의 50%만큼 감면

** 채용할당쿼터 이상 신규채용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청년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 허용

□ **(인력양성사업) 취업연계형 인력사업으로 전환**

○ 참여인력 **채용**(취업)**의향 사전 조사·관리** + 예산한도 내에서 **취업성과 중심으로 내내역사업간/참여대학간 예산지원 차등화**

* 직접적 취업연계형 사업인 섬유인력사업(5.2억)에 旣적용('18) → '19년부터 학위과정 연계 4개 인력사업(1,052억)에 추가 적용

2 **(지역)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지역사업 개편**

□ **(지역산업)** 혁신도시 중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시·도 협력사업을 **채용조건부 지원으로 변경**(2~5억당 1명) **또는 일자리창출 계획 평가배점**(4~10점) **신설**

□ **(클러스터·산단) 일자리 연계형 미니클러스터(MC) 신규 운영** 및 채용조건부 지원 도입(4억당 1명) 등

3 **(무역·투자) 일자리 중심으로 핵심 수출지원사업 개편**

□ **(무역보험)**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특별지원제도" 신설**

* (선적前 보증) 한도 최대 10억 추가, 보증료 50% 할인, (선적後 보증/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보증(보험)료 최대 50% 할인

□ **(수출지원사업)** 전시회·지사화 등 마케팅 지원사업에 **일자리 항목을 최대 평가지표로 신설**(해외전시회, 20점)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가점 부여**

4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 **(에너지신산업 융자·보급사업)** 선정평가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형으로 전면 개편**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고용증대 효과 있는 보급사업에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공모 심사시 가점부여 및 융자한도 확대 등

□ **(일자리 효과)** 사업 개편을 통해 **'18~'22년간 총 35,000여개 일자리 추가 창출** ('18년 3,900여개, '19년 이후 年 7,900여개 추가)

< 분야별 일자리 연계형 개편(안) 및 일자리 효과 개관 >

구분	내역사업 수 /예산액	일자리요소 반영		추가 일자리 효과	
		개편 전	개편 후	'18	'19
산업·기술	351개 23,316억	57개 2,904억	157개 16,422억	100여개	400개 내외
지역	38개 5,434억	6개 2,050억	13개 3,810억	1,900여개	2,500여개
무역·투자	36개 4,357억	6개 1,305억	9개 1,632억	500여개	600개 내외
에너지	214개 31,833억	5개 1,098억	51개 10,908억	70여개	700여개
기타	156개 2,301억	2개 247억	5개 335억	-	10개 내외
합계	795개 67,241억	**76개(9.6%) 7,604억(11.3%)**	**235개(29.6%) 33,107억(49.2%)**	**3,900여개***	**7,900여개***

* "고용친화형 R&D"에 따른 일자리효과 일괄 포함('18년 1,300여개, '19년 3,600여개)

[2] 공공기관 투자사업을 통한 민간 청년일자리 확대

□ **(투자확대)** 한전, 한수원 등 투자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 중심의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9조원 투자사업 추진**('18~'22년 74.6조원)

* (에너지·자원 15개)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기술, 전기안전공사, 원자력연료, 에너지공단
(산업·기술·무역 2개) 산업기술시험원, KOTRA

○ '13~'17년의 연평균 10.1조원 대비 **4.8조원 증가**

□ **(추진분야) 5대 분야, 100개 투자사업**

❶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 분야 설비·R&D 투자**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분야 일자리 확충

❷ **(발전 등 주력산업) 발전소 건설·증설, 발전설비 안전성·효율성 제고** 투자로 위탁업체 고용 및 운영인력 수요 창출

❸ **(해외진출 프로젝트) 해외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내·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해외취업 지원

❹ **(상생 생태계 발전) 동반성장 사업**(인건비·금융·판로·R&D·인증 등 지원)을 통한 중소·협력업체 일자리 확대

❺ **(지역일자리)** 에너지밸리 등 **지역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기업 투자**를 통해 지역일자리 확대

□ **(민간일자리 창출)** '18년 1.7만여개, '19년 1.8만여개 등 **'18~'22년 5년간 총 88,000여개의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 '13~'17 연평균 13,000여명 → '18~'22 연평균 17,000여명(+**4,600여명**, 35%↑)

<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

분 야	'13~'17 실적	목 표						사업 수
		'18	'19	'20	'21	'22	계	
에너지신산업	41,620	10,710	11,510	11,390	9,830	9,490	52,930	25
발전 등 주력산업	12,690	2,940	3,020	2,940	2,950	3,050	14,900	18
해외프로젝트	5,550	1,900	1,910	2,330	2,150	2,320	10,620	9
상생 생태계 발전	1,800	680	660	690	740	770	3,530	33
지역일자리 창출	3,960	1,320	1,650	1,700	1,390	740	6,810	15
총계	65,620	17,540	18,750	19,050	17,070	16,380	88,790	100
(투자금액:조원)	50.6	15.7	15.4	15.7	13.1	14.7	74.6	

4. 후속조치 계획

□ 산업부 일자리 연계형 사업개편

○ **(규정 개정)** 산업부 예산사업(235개) 및 포상(18개)의 일자리 연계형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신속 개정**(~'18.7월)

*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 산업부 장관포상 지침, 전담(위탁)기관 내부 규정 등

○ **(이행체계 구축 및 실적점검)** 산업부(·공공기관) 사업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작성하여 분기별 점검**

- 산업부 예산사업 **전담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관 사업의 일자리 성과 관리체제 구축**(산업부 담당부서 합동)

○ **(평가·환류)**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시 일자리 창출실적 반영**

□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투자사업

○ **(일자리 연계 강화)**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 추진시 일자리 연계를 대폭 강화**

> **(건설·시공)** 발전소 등 신규 건설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 **(스타트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R&D, 신규사업 추진시 **스타트업 우대 및 육성**
> **(상생 생태계)** 협력업체 신규 등록·평가시 **일자리실적 평가**
> **(청년 해외취업) 해외진출 프로젝트 진행시** 청년 해외취업 연계 사업 **병행 추진**

○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 **(자체 채용) 공공기관 하반기 자체 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 수시증원을 통해 '18년 신규채용 확대 검토 중인 17개 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 참여

- **(협력 민간기업 채용)**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 **공공기관 합동**으로 **민간 협력기업 청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